



제9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第九届 韩中政策学术会议

새로운 시대의 한중관계 모색
ROK-China Relations in the “New” Era

2022. 12. 19. PM 14:00~18:30

주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구재단

장소 ZOOM Webinar

* 학술회의를 목적으로 한 비공개 책자이므로, 원문 인용시 반드시 저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함.

*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T. 031-219-3861 H. <http://ucpi.ajou.ac.kr> E. minhui1212@ajou.ac.kr

초대의 글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前중국정책연구소)는 2014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매년 중국 측과 한-중 정책학술회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대의 한중관계 모색”이라는 주제로 12월 19일 제9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사태를 거치면서, 교류가 거의 단절되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등 풍파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의 발전은 그간 한국과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기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차원의 공급망은 이제 더 이상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망은 지역과 세분화된 분야에 따라 새로이 설정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성은 기존 세계적인 공급망 체계에서 한중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큼니다. 한중 관계의 큰 축이었던 미중 관계와 기존 국제질서, 보완적인 경제구조가 모두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미래 한중 관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한국과 중국 모두의 미래에 관건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당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부가 기존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한중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양국은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차원의 이해를 높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타성에 젖은 사고와 이해로는 새로운 시기 한중관계를 제대로 다루어 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한중관계 설정을 위한 진지한 모색을 해 나가는 데 일조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이나 중국의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은 이 회의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중시해왔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측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기관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도 각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친히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시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한국 새정부의 대중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의가 양국 정부의 정책 결정은 물론 학술분야의 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고, 한중 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측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졌지만 본 회의는 화상회의로나마 소통의 끈을 지속해 왔습니다. 본 회의에 참가해 주시는 중국 측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23년에는 한중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대면으로 양국의 미래와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소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7일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김흥규 배상

致 辞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国际关系学院教授

尊敬的朴振外长、尊敬的千辰焕副理事长、尊敬的中韩两国各位专家学者，大家好！今天，很高兴也很荣幸参加亚洲大学美中政策研究所主办的第九届中韩政策学术研讨会。这次会议的主题是“新时代的中韩关系。会议将从全球、地区和两国关系三个层面探讨这个问题。

我琢磨了一下这个会议的日程，觉得举办这个会议很及时，也很重要。说我们举办这个会议很及时是因为中韩两国关系发展的大环境正在出现巨大和深刻的变化，这个大环境就是国际秩序进入弱化期，地区局势进入分化期，中韩关系进入重塑期。

国际秩序弱化主要体现在作为现存国际体系的主要受益方，西方国家维护国际秩序的资源 and 意愿大幅下降，一些国家为了追求本国利益挑战国际法和国际规则的现象明显增加（俄国特别军事行动，朝鲜发展核武，美国挑战中国在台湾问题上的主权等等），利益相关国家选择抱团取暖的意愿上升：如美国和盟国的各类同盟伙伴关系，中国与一些国家的合作伙伴关系，全球治理合作水平不断下降。

地区局势分化主要体现在随着中美关系的紧张，为了围堵中国，美国加大了给中国周边国家施加的压力要求后者选边站，中国也加强了周边外交，反对周边国家选边站。面对来自不同方向的压力，地区国家内部不同势力之间博弈升级，政策不确定性增加。无论地区国家最终选择如何，地区局势分化趋势有所加强。

中韩关系进入重塑期。经过前期努力，中韩关系逐渐走入正常。但面对美国选边站的压力，韩国面临两难困境，如面对美国限制部分芯片向中国出口的压力，出于企业利益出发，韩国芯片生产企业不得不执行。但面对中国的反制，认真执行美国的要求可能会导致韩国芯片企业失去其赖以生存的中国市场。中国也面临两难，如果韩国企业选择执行美国的要求，中国对此的反制也会给中国反对韩国选边站增加难度。中韩关系何去何从最终取决于面对外部压力和内部的争论，两国政府最终的选择以及它们之间的互动。

说我们举办这个会议重要是因为管理好中韩关系对于两国来说具有前所未有的意义。对于中国而言，处理好中韩关系是打破美国对华战略围堵的重要环节，对于韩国而言，处理好韩中关系是韩国赢得下个十年安全国际环境的关键一步。

期待参加此次会议的专家学者就评估当前国际和地区形势和处理好中韩关系提出宝贵分析和建议。预祝会议举办成功！祝中韩两国与时俱进，处理好两国关系，为两国和平相处，为地区和地区的和平和繁荣，做出正确选择，发挥历史性作用！

最后，借此机会，感谢朴振外长，感谢千辰焕副理事长，感谢各位参会的专家学者！感谢为组织这次会议辛勤工作和付出的双方工作人员！祝中韩关系稳定、改善和不断发展！

제 9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프로그램

주제 새로운 시대의 한중관계 모색

주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구재단

일시 2022. 12. 19. PM 14:00-18:30

개회사 (14:00-14:20)

축사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자칭귀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주임,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Session 1 (14:20-15:20)

주제: 현재의 국제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왕이저우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토론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파오동선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Session 2 (15:20-16:20)

주제: 새로운 해양안보 메커니즘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사회 왕동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부주임, 북경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발표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주평 남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남경대 교수,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토론 김원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치하오텐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비서장, 북경대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Session 3 (16:20-17:20)

주제 : 동북아 안보관계

사회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발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및 수석연구위원

리춘푸 하남재경정법대학 동북아연구센터 교수

토론 이백순 전 주호주한국 대사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부연구원

Session 4 (17:20-18:20)

주제 : 한중관계의 전망

사회 장징첸 산동대 동북아학원 부원장,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산동대 교수

발표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장원링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산동대 교수

토론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정지용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복단대 교수

Wrap-up (18:20-18:30)

왕 동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부주임, 북경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체 토론자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왕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第九届 韩中政策学术会议议程

主 题 新时代的韩中关系
主 办 亚洲大学美中政策研究所
赞 助 韩国海洋科技院，金九基金会
日 期 2022. 12. 19. 下午13:00-17:30（北京时间）
方 式 Zoom Webinar

开幕式（13:00-13:20）

祝 词 朴 振 韩国外长
千辰焕 金九基金会副理事长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Session 1（13:20-14:20）

主题： 如何评价当前国际安全形势？

主持 金兴圭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亚州大学政治外交系教授

发表者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王逸舟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讨论者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Session 2（14:20-15:20）

主题： 如何建立新的海上安全机制？

主持 王 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国际关系学院教授

发表者 金德起 韩国海军士官学校 教授，韩国军事学会副会长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学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讨论者 金元熙 韩国海洋科技院 海洋法·政策研究所 前任研究员
祁昊天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秘书长、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Session 3 (15:20-16:20)

主题： 东北亚安全关系

主持 田奉根 韩国国立外交院教授

发表者 陈昌洙 世宗研究所日本研究中心主任、高级研究员

李春福 河南财经政法大学东北亚研究中心教授

讨论者 李百顺 前驻澳韩大使

龚克瑜 上海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中心副主任、副研究员

Session 4 (16:20-17:20)

主题： 中韩关系展望

主持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发表者 洪铉翼 韩国国立外交院长

张蕴岭 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讨论者 朴胜赞 中国经营研究所所长，龙仁大学中国学系教授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教授

Wrap-up (17:20-17:30)

王 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国际关系学院教授

金兴圭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所长、亚州大学政治外交系教授

综合讨论者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

王俊生 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Session I : 현재의 국제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신냉전 시대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新冷战时代国际秩序的变化与韩国的应对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신냉전 시대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1. 현 국제정세의 특징

-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 끝나지 않은 COVID-19 팬데믹의 시대
 - 지정학의 귀환, 강대국 경쟁의 재현 - 자국 이익 위주 '各自圖生'의 시대
 - 국제제도와 레짐의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 퇴조 - 파리기후협약, INF, WHO, WTO
 - 물류와 교역의 제한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침체

-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 영토주권의 무력 변경은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서구사회의 일치된 대응 - 미/유럽 대 중/러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 구도 정착
 - 미중 전략경쟁 심화 - 무역전쟁에서 이념, 체제, 가치의 경쟁으로 확산

- 3重瞞에 처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 남북대화 단절 - 한국의 '운전자' 역할에 실망, 추가적인 역할 기대 포기한 듯
 -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자발적 고립
 - 그런 가운데 2022년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심화, 9월 핵무력법 제정 등 핵독트린의 공세적 진화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영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외부 공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했을 것으로 추정 - 게다가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러시아로부터 전술핵 사용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추정

-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부족한 포탄과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관측도 제기,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재건사업에도 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짐.
-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중러 3국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위기에도 중요한 시사점

-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만일 중국이 푸틴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따른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대국 충돌의 지역적 핫스팟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안보 혼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 아시아의 관점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의 유럽으로의 피벗 가능성

- 미국이 유럽으로 돌아가면 아시아에 투자할 안보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적국을 상대해야 함.
- 그렇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3.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대응

○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개념

-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규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

○ 대북 ‘담대한 구상’ 발표

- 비핵 평화 변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변영 구현
- 우리의 주도적 역할, 한미공조 중심
-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 과감한 초기 조치 -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할 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
- 인프라/민생/경제 5대 사업 추진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행

○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

- 3대 비전: 자유(freedom),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 3대 추진원칙: 포용(inclusiveness), 신뢰(trust), 호혜(reciprocity)
- 자유, 평화, 번영 분야별로 총 9개 중점 과제 추진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当前国际安全形势评估

왕이저우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王逸舟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当前国际安全形势评估

王逸舟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第一，作为安全背景的世界经济社会环境。 总体表现：持续低迷的经济严重拖累社会；民众不满情绪在各国普遍增长，全球范围民族主义和民粹主义抬头。

第二，国际安全形势当下特点。 1) 主张开放和国际合作的政治派系、知识分子和民间声音减弱，对国务活动家和外交部门的负面掣肘增加；2) 各国政府外交和安全领域的合作对话减少、疑虑与竞争情形增多；3) 国际安全可预期性减弱、风险不确定性上升。俄罗斯与北约的对抗，中美之间的战略竞争，是突出表现。

第三，中共“二十大”之后的中国。 1) 并未改变改革开放政策基调，但更重视自身安全和国内市场，对现有国际体系信任度有所下降；2) 在外交与国际安全领域，要求改革现有国际规则，同时加快倡导建立新的多边安全机制；3) 中国近期的主要警觉区域，是美国插手的周边不稳定事态，如台海、南海、朝鲜半岛的安全动向。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왕이저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첫째, 안보 배경으로서의 세계 경제 및 사회 환경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사회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제안보상황의 현재적 특징

- 1) 개방과 국제협력을 주장하는 정파, 지식인, 시민의 목소리가 약화되고 국가활동가와 외교부처에 대한 부정적인 제약이 증가하였다.
- 2)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대화가 줄어들고 의구심과 경쟁이 심화 3) 국제 안보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결,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이 그중 두드러진 현상이다.

셋째,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의 중국

- 1) 개혁개방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자국안보와 국내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 국제체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다.
- 2) 외교 및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기존의 국제규범을 개혁함과 동시에 새로운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3) 최근 중국의 주요 경계 지역은 미국이 개입하여 주변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 예를 들면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한중정책학술회의 토론문

韩中政策学术会议讨论稿

파오동선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및 국제정치학과 교수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韩中政策学术会议讨论稿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一、朝鲜对外政策调整主要动因

第一，朝鲜要提升非对称打击性能，以做核威慑力的重要补充。

- 在现代战争（或局部冲突）中，起关键作用的依然是以高科技为基础的尖端常规武器的性能，而在这一领域朝鲜越来越感到战略上的被动。（朝鲜GDP300亿，韩国军备支出500亿）/安全困境
- 在南北军事差距不断扩大的背景下谈论无核化，对朝鲜来讲是不符合逻辑的。

第二，朝鲜已对今后几年朝美、朝韩，尤其是朝美关系失去信心。

- 中美战略竞争（意思形态、经济、科技、地缘政治等）全面展开，“阵营化”趋势加剧，对抗性在增加。
- 2019年（战略忍耐） 2021年（以强对强、以善对善），2022年（以强对强，正面对抗）
- 尹锡悦政府提出所谓“大胆构想”，实际上仍然以李明博“无核、开放、3000”构想为框架。（金与正8月18日谈话：“别做白日梦”。）

第三，双方进入以强对强、以牙还牙的敌意螺旋循环。

- 以强对强、正面突破是金正恩执政以来一贯的敌对政策原则
- 韩国方面，自尹锡悦政府上任以来，同样强调以实力加强应对来自朝鲜的核导威胁，要通过“压倒性韩美联合防卫态势，以加强对朝遏制力。”

第四，朝鲜拟推动地缘政治外交，提升中美战略博弈中的相对地位。

- 根据美国今年10月发布的国家安全战略报告，美国认为世界今后十年将处在决定性拐点，而中国是美国唯一的竞争对手，最重要的地缘政治挑战。
- 金正恩曾主张可驾驭大国的“地缘政治要冲地带论”，中美俄大国博弈有利于朝鲜提升地缘政治地位；中韩两国与朝鲜是“特殊关系”，中韩关系发展将加剧朝鲜孤立感，若围绕朝鲜问题中韩之间分歧加大，这同样对朝鲜有利。

二、半岛局势发展趋势及影响

第一，朝鲜有可能在核、导方面作出更高层次上的军事动作，半岛局势有可能进一步升级。

- 半岛安全困境进一步加剧，以强对强对抗格局难以改变；
- 崔善姬：“我提醒，朝鲜拿着明确的应对方案注视美国和联合国安理会的动向。”
- 2023年将是朝鲜“祖国解放战争（朝鲜战争）”胜利70周年；

第二，韩国尹锡悦政府在战略问题上将进一步依赖于美日。

- 韩国除了进一步依赖“延伸威慑”之外，自身能使用的应对手段极其有限。
- 一是尽管韩国某些舆论主张重新考虑重新部署美国的战术核武器，而美国主要以“延伸威慑”来安抚盟国被“抛弃”顾虑；
- 二是进一步加强韩日之间的军事合作。
- 三是韩美进一步操作反华舆论，把半岛危机责任转嫁中国，以改善国内舆论。

第三，将进一步加剧朝鲜半岛地缘格局的分化。

- 韩国在大幅增加国防投入的同时进一步加强韩美同盟合作。美国则利用韩国的战略诉求，希望把韩国拉拢参与涉华议题上的合作。美韩同盟合作将冲击中美在半岛的博弈态势。
- 易言之，美韩同盟涉华合作的强化势必导致中朝关系、中俄朝关系的强化，进而导致朝鲜半岛和东北亚爆发“新冷战”，这显然只是有利于美国、而不符合中韩两国利益。

总体来讲，

朝鲜半岛地缘政治分化比较明显，而且这是美国希望看到的。美国有意把朝鲜推到中俄这一边，形成所谓“权威主义”和“民主国家”量大阵营假象，进一步把韩国拉到自己阵营，以实现加强对华竞争筹码之目的。而笔者认为，中韩关系是阻止半岛地缘政治分化重要双边。

提问1：中韩之间最大的战略性分歧来自于朝鲜问题。您认为尹锡悦政府“胆大构想”有多大可行性？若可行性较低，是否有“次优选择”或可替代方案？

提问2：尽管韩方推动以韩美同盟为中心的对外政策，在涉华问题上步步紧逼中国底线但我相信韩方不希望中韩关系完全破裂。问：尹锡悦政府到底有没有改善和发展中韩关系的政治意愿？具体表现是什么；如果有，韩方希望在哪些领域继续拓展中韩合作？

한중정책학술회의 토론문

파오동선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주임,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1. 북한의 대외정책 조정의 주된 이유

1) 북한은 핵 역지력의 중요한 보완책으로 비대칭 타격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 현대전(또는 국지분쟁)에서 핵심역할은 여전히 첨단재래식무기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능이며, 북한은 이 분야에서 점점 전략적 소극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 GDP 300억, 남한 군사비 500억) / 안보 딜레마

-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2) 북한은 향후 몇 년 동안 북미, 남북 관계, 특히 북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 미중의 전략적 경쟁(사상, 경제, 기술, 지정학 등)이 본격화되고 '진영화' 추세가 심화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2019년(전략적 인내), 2021년(전략 대 강함, 친절 대 친절함), 2022년(강함 대 강함, 정면 대결)

-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소위 "대담한 개념"은 사실 여전히 이명박의 "비핵화, 개방, 3000"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8월 18일 김여정의 토크: "몽상하지마".)

3) 양측은 강자에 대한 적개심과 티포 타트에 대한 적대감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일관적 적대시 정책원칙으로 강자와 강자를 대적하여 정면돌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남한 측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압도적 남조선'을 통해 대북 역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의 사용도 강조해왔다. (미 합동방위 태세)

4) 북한은 지정학적 외교를 촉진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게임에서 상대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 올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가 결정적인 전환점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이자 최대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이다.

- 김정은은 한때 강대국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핵심지대론'을 주창했다. 한국

이 북한 문제를 놓고 한중 간 이견이 커지면 북한에 이롭다.

2. 한반도 정세와 발전 방향 및 영향

1)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정세는 더욱 고조될 수 있다.

-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는 더욱 심화되고 강대국의 대결 구도는 바뀌기 어렵다.
- 최선희 "북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명확한 대응 방안 마련해 주시도록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 2023년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승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2)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에 더욱 의존할 것이다.

- "확장 억제"에 더 의존하는 것 외에도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극히 제한적이다.
- 첫째로, 한국의 일부 여론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주로 "포기"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확장 억제"를 사용한다.
- 둘째로는 한일 간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 셋째는 한국과 미국이 국내 여론을 개선하기 위해 반중 여론을 더욱 조작하고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이다.

3) 한반도의 지정학적 분단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한국은 한미동맹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대폭 늘렸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이점을 이용한다. 한미 동맹과 협력은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게임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즉, 한미동맹에서 중국 관련 협력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북-중 관계, 중-러-북 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냉전' 발발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을 벌이는 것은 명백히 미국에게만 이익이 될 뿐 중국과 한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양극화는 비교적 명백하며,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이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밀어 붙여 소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국가'가 다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남한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대(對)중국 협상 카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본인은 한중관계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양극화를 막는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믿는다.

질문 1: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전략적 차이는 북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개념"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 "두 번째로 좋은 옵션" 또는 대안이 있는가?

질문 2: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중국의 최종선을 압박하지만, 한국은 한중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하는가?

새로운 해양안보 메커니즘(Mechanism)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如何适应新的海上安全机制?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金德起

韩国海军士官学校 教授, 韩国军事学会副会长

새로운 해양안보 메커니즘(Mechanism)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1. 새로운 해양안보 메커니즘 수용을 위한 도전 요인

1) 한·중·일간 해양경계선 확정 문제와 해상충돌 가능성

- 한·중 간 서해 중간선 획정을 위한 이견
 - * △ 한·중 간 합의로 서해에 설정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또는 인근에 중국 설치 부표
 - * △ 중국 군함의 동경 124도선을 수시로 넘는 문제
- 한·중·일 간 동중국해의 해양 자원개발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 * 한·중·일 3국은 UN대륙붕한계위원회(UNCLCS)에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자국이 주장하는 경계선 설정 구역안 제출
- 한·중·일 간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과 타국 ADIZ 침범

2) 영토분쟁을 둘러싼 갈등 고조와 해군 군비경쟁(Naval Arms Race)

- 동중국해 중·일간 영토분쟁
- 일본의 남서제도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
 - * 2022년대 말까지 사정거리 1,000km를 가진 미사일 배치 예정
- 타이완해협과 해상교통로(SLOC)의 중요성

3) 해상과 영공에서 충돌/분쟁 가능성 증대

- 중국 단독 또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 * 중·러가 KADIZ 침범 시 마다 한국공군 전투기의 대응 불가피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미 또는 중·러의 연합훈련 증가
- 동해 러시아 잠수함 활동 증가

4) 역내 역외 해상에서 해적과 해양테러 지속

- 아프리카 기니만, 아덴만, 말라카해협 등

2. 한·중의 새로운 해양안보 메커니즘 수용을 위한 노력 방향?

1) 한·중 간 인도-태평양의 평화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노력 지속

- 한·중 모두 타이완·바시해협은 무역을 위해서 중요한 SLOC임.
 - * △ 2022년 8월, 중국의 타이완 주변 해역 사격 구역설정과 타이완해협과 바시(Bashi) 해협 봉쇄는 한국에게 SLOC의 중요성을 再인식 시켜 줌.
 - * △ 특히 중국도 동북 3성의 경제를 위해 同 해협의 안전한 보호는 중요. 동북 3성에는 세계 물동량의 16위 안에 드는 항구가 5개나 있음.
- 해적 등으로부터 말라카해협, 아덴만, 기니만 등에서 한·중 선박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
 - * 양국 선박이 해적에 납치될 시 인근에 있는 선박의 긴급 지원
- 해양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협력 강화와 함께 양국 간 협력 지속

2) 한·중 간 동북아 해역에서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도록 유도

- 현재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러시아와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통망을 운용 중임.

※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현황

구 분	운용현황	비 고
남북 직통망	운용 중단 (북한측 미온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서해상 군사 직통망 재가동 합의(2018.1.9.) ■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으로 북에서 먼저 중단
한·중 직통망	가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DIZ 작전 시 활용 ■ 기존 직통망(한국 MCRC-중국 북부전구) 외 추가설치 (2019년 KADIZ 충돌 계기) ■ 한·중 국방전략대화(2011년 시작)

한·러 직통망	가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 체결 ■ 한·러 공군 직통망 설치 MOU 문안 협의(2018.11.16) ■ 한·러 해·공군간 직통망 설치 MOU 체결(2021.11.11.) <p>* 해군: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공군: 한국 제1중양관제소와 러시아 동부관구 11항공 및 방공군</p>
한·일 직통망	가동 중 (군사정보 직통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합의 계기로 설치 ■ 2019년 일 초계기, 한국 구축함 위협 비행시 한국해군작전사, <p>한·일 직통망 이용 일본측에 강력 항의</p>

- 한·중 주도해서 동북아에 한·중·일·러 간 우발적 충돌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가능

3) 한·중 간 해양신뢰구축(MCBMs)을 위한 노력 지속

- 한·중 간 서해에서 단독 훈련 시 사전 통보
- 한·중이 역내 다자대화를 주도하여 해양신뢰 구축에 기여

※ 역내 다자대화 현황

구 분	주 기	시기/내용	성 격	
			억 제	신뢰
ARF	매년 중순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안보 협의		○
상그릴라 대화	매년 중순	■ IISS 주관 국제안보 행사		○
ADMM-Plus	매년 말	■ 동남아시아 협력, 안보협력, 초국가적 위협 대응 관련 공조		○
ADMM-Plus 해양안보분과	-	■ 해상위협 공동대응, 연합훈련 해양 신뢰구축조치 공조		○

WPNS	매년 중순	역내 해군 간 협력적 구상 토의		○
남중국해 국제 콘퍼런스	매년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중국해 해양갈등 완화를 위한 소통 및 정보교환 창구 * 학자 등 관련 전문가 참가 		○
상산(香山)포럼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주관하여 트랙 1.5로 진행되는 국제 포럼 ■ 주관/지원: 국방부/외교부(2014년-) 	○	○
IPRD	매년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가 주관하는 해양질서 및 안보 관련 국제회의 	○	○
Seoul Defense Dialogue(SDD)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 안보토론과 국방협력의 장 ■ 주관: 국방부(2012년-) 		○

참고사항 IPRD: Indo-Pacific Regional Dialogue

-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 * 조업 선박 조난, 선박 침몰 등
 - 잠수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 * △ 중국은 우수한 심해 잠수함 구조함(DSRV)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상호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 * △ 일례로, 2021년 4월, 인도네시아는 잠수함(KRI Nanggala)이 53명의 승무원과 함께 발리 북부에서 실종된 후, 인도에 긴급 요청으로 DSRV 지원을 받음.
- 4) 한·중 간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위한 노력 지속
- 한반도 주변 해역 불법조업, 불법 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한 협력
 - * 同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되어 조업 중인 선박에 조난 경보 발신 장치(DAT: Distress Alert Transponder) 도입
 - 한·중의 중요 SLOC 상 위협 정보 획득 시 정보공유
 - * 일례로 호르무즈해협, 아덴만, 기니만 등

한중 해양안보 메커니즘

中韩海上安全机制

치하오텐

북경대 중외인민교류연구센터 비서장,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祁昊天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秘书长、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中韩海上安全机制

祁昊天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秘书长、国际关系学院助理教授

(1) 基础稳步有进

- 涉海、涉安全敏感事件减少（如渔业纠纷引发的海上暴力冲突事件）
- 联合执法、合作管理水平提升

(2) 短板明显

- 危机防控机制不健全
- 热线不热
- 危机管控政治共识的可操作化
- 危机预防与规避措施
- 继续推进划界谈判
- 半岛安全形势的外溢
- 非传统安全挑战
- 美国影响的不确定性
- 军事技术发展的不确定性

한중 해양안보 메커니즘

치하오텐

북경대 중외인민교류연구센터 비서장,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1) 꾸준하고 진보적인 기반

- 해양 및 안보 관련 민감한 사건 감소(예: 어업 분쟁으로 인한 폭력 분쟁)
- 공동 법 집행 및 협력 관리 개선

(2) 명백한 단점

- 위기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음
- 핫라인이 잘 되지 않음
- 위기관리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운용화
- 위기 예방 및 회피 조치
- 분계선 협상 계속 추진
- 한반도 안보상황의 파급효과
- 비전통적인 보안 과제
-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불확실성
- 군사기술 발전의 불확실성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朝核问题与东北亚安全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및 수석연구위원

陈昌洙

世宗研究所日本研究中心主任、高级研究员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¹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및 수석연구위원

1. 미국

□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바이든 행정부

1)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공감대를 재확인

-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핵심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책무를 강조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이며 이에 대해서 한미가 동일한 생각

2)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재확인함.

-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핵전력, 재래전력, 미사일방어전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선언
- 2018년까지 2차례 회기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확장억제 전략협약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

3)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연합대비태세의 강화에 대해서도 한미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2018년 북한의 요구에 의해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진화된 위협을 고려하여 확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
- 이후 8월 UFS 훈련의 재개 등 연합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주요 훈련들이 정상화되기

¹ 이 글은 2022년 민주평통주최 진창수, 차두현, 박병광, 엄구호 등 특별 대담을 참조하였음

시작하였음. 연합대비태세의 강화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주요한 관건이 됨.

-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금년 북한의 모라토리엄 위반시 문제의 UN 안보리 회부)

2. 중국

□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 중국은 한반도정책의 주요 기조로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입장은 국제사회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및 방법론에서 차이를 노정

-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지역의 안정은 물론이고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
-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원인은 외부세계의 안보위협에 기인하는 것이고, 제재와 압박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2)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선 :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체제의 안정 ▲대북영향력 유지 ▲북핵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되며, 이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중국의 對한반도정책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서 존속하는 것이며, 이 명제는 북중관계의 골간을 이루는 것임.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붕괴 및 한반도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을 불원하며,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상황적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
- 미중관계의 틀에서 북핵문제를 접근 :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외 관계는 미중관계이고, 이른바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성 대두
- 중국은 ‘관리자’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봄.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과 미국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중국은 상황 악화를 관리하면서 대화유지와 재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임.

- ※ 중국은 북한의 과도한 일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전략물자 제공 중단 등 직접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려는 것은 중국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3. 일본

□ 일본의 비핵화 정책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강경론의 견지

-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일 양국은 핵, 미사일, 납치 문제와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통해 국교를 수립한다는 이른바 평양선언에 합의함.

-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자, 아베 내각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주장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아베의 유연을 이어간다는 입장에서 일본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를 포기해야 하며, 완전한 비핵화 관련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압박(maximum pressure)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북일 간 갈등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가 미해결인채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것에는 우려. 일본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중시된 나머지 납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따라서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3) 한반도평화체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변화할 경우 일본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 2019년 하노이 북미 대화의 좌초와 관련 일본 요인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음

□ 일본의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 대응 태세

1 '국가안정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개정

-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방위 3문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에의 대응을 전면에서 나타냄. 2013년 안보전략에서 '우려'라고 했던 표기를 '도전'으로 끌어올렸다. 전후, 정책 판단으로서 참가왔던 반격 능력의 보유를 내세웠다.

- 중국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 기술. [북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러시아]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 움직임도 맞물려 안보

상 강한 우려

- 방위 3문서는 '도전',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방위수단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전후 방위정책의 대전환. 반격 능력의 보유를 새로운 방위력 강화의 기동으로 한다. 전수방위 하의 '필요·최소한의 자위조치'로 규정하고,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하면 상대영역에 있는 '군사목표'에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 반격 수단이 되는 장사정의 미사일을 도입한다. 국산형 개량에 더해 미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구입한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변칙 궤도를 나는 극초음속 유도탄에 대해서는 잠수함 발사형도 포함해 개발한다.

- 방위비는 '2027년도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기록했다. 일본은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의 틀을 마련했고 이후 거의 1%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 사이버, 우주, 무인기 등 새로운 전투 방법에 대한 대응을 내놓았다.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시라도 징후가 있으면 공격원을 감시, 침입 등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한다.

1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무제 관련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중요함. 2021년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 최근 미국일 발간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도 한미일의 협력 확대가 명시되어 있음. 인도-태평양 행동계획하 10개 핵심 중에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미일 협력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

- 일본의 역할은 현재 주일 미군의 후방지원에 한정.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도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미수교와 함께 북일수교가 불가결함.

4. 러시아

□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근본 입장은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분리하는 것

- 북한의 '군사적 핵 보유' 및 핵보유국 지위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북한 체제 유지가 위협받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해 왔음. 또한 북한의 핵도발이 주변국들의 군사행동 증대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되 역내 긴장조성에는 반대해 왔음.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망을 정권생존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파악하고 북핵 위기 심화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국에 돌리고자 하는 것임.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을 주장하는 한미일과 달리 러시아는 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 주장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핵 해결 더욱 어려워졌다고 인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종건과 같이 비핵화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됨.

5. 한국의 대응방향

○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일차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채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확장억지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공조를 강화해야 함

-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의 강화를 모색하고, GSOMIA는 한일 및 한미일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함. 한일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전략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도발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위협요인.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응한다는 것은 당연.

- 한미일 삼국은 유사사태를 상정한 공동훈련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서로의 군사적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군사적 개편을 하는 것을 위협요인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됨.

○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

-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고, 변화된 정책방향을 북한에게 각인시킬 필요. 한국의 국가정체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 등)을 바탕으로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 불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

- ‘정상화’의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개발·실험, 정전협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타당할 것. 북한의 실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분명한 위협인식 및 상황 규정(『국방백서』 등에서의 북한 위협 관련 기술 명확화)

- 북한의 핵무기/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원칙에 따라, NLL 월선/ DMZ 총격 등에 대해서는 교전규칙(ROE)에 입각하여 대응

○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

- 남북한 긴장조성으로서의 대북압력이 아니라 북한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의 압력 구사.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과도한 증대를 회피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관계 관리.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및 실행하는 것 역시 중요

-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징벌(필요시)과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경감해주는 것을 구분하여 접근. 북한 정권의 수용을 전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

-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하여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고, 대북 투자 컨소시엄 구성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계획 역시 발전시켜야 함.

○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신흥안보(Emergin Security) 시대에서 의미를 지님

- 환경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북한의 국제사회 내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의 정상체제와 유도에도 기여할 것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환경·평화지대화’ 도모

동아시아 안보구조의 진화와 한중관계의 추이
东亚安全结构演进与中韩关系走向

리춘푸

하남재경정법대학 동북아연구센터 교수

李春福

河南财经政法大学东北亚研究中心教授

东亚安全结构演进与中韩关系走向

李春福

河南财经政法大学东北亚研究中心教授

1、东亚安全结构演进

两个判断：

第一，全球并非新冷战（阵营）格局。中俄并非一体，东盟、欧州、亚非拉等存在广泛灰色中间地带。美虽加大意识形态对立，全球化时代。第二，东亚呈现事实上的两强格局。首先地区格局不由两强实力差距决定，两强与其他国家间实力差距决定。其次，两强与其他国家关系定位非常重要。俄乌冲突、俄朝关系不会根本影响东亚安全走势，中国对半岛局势的稳定和平作用仍是压倒性的，美国对朝战略无视政策短期内无改变情况下，中韩合作、韩朝关系的管理尤为重要。

2、尹锡悦政府对外政策基调基本确定

尹锡悦政府的对外政策基调逐步清晰化，可概括为依美亲日、遏华敌朝。首先，全方位依赖美国、加盟美遏华阵营。其次，着力改善韩日关系，对朝政策上强调韩美日三边合作。淡化历史问题，对日本加强军备予以默认。再次，推行价值外交，刻意塑造韩美日 VS 中朝俄对立结构。令人忧虑的是韩国对华、对朝政策并不是其优先顺序。

近日，韩国外交部和统一部在官方报道材料中使用“韩日中”、“美北（朝）关系”，取代惯用的“韩中日”、“北（朝）美关系”表述。韩国官方表示“今后将混用两种表述，宣称并不意味其政策基调发生变化”。但外界普遍认为，此举正反映尹锡悦政府优先韩美日关系及韩美同盟的政策顺序。

与此前一天11月22日，韩统一部发布的尹锡悦政府“统一、对朝政策‘大胆构想’”说明资料上“若朝鲜致力于完全的无核化，支持‘美北（朝）关系’正常化”。韩朝关系作为特殊的民族间关系，尹锡悦政府明确其“主敌”（国防部）。韩外交部、统一部、国防部对华、对朝表述变化，值得关注。

3、几点建议

1、珍视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提法，维护中韩睦邻友好关系是其首要任务。外交不能战略选边，可议题选边，韩国提高战略自主性，发挥其全球强国、朝核问题上的独特作用。

2、尽快启动中韩间2+2对话机制，1.5轨和2轨学术政策对话。启动中朝韩美四方会谈为目标，创造条件。尹锡悦政府的对朝政策

동북아 안보 상황
东北亚安全形势

이백순

전 주호주한국대사

李百顺

前驻澳韩大使

동북아 안보 상황

이백순 (전 호주대사)

1. 동북아 안보상황 날로 위중

- 신냉전 구도, 북방 3각 vs 남방 3각 대립 격화
- 각국 군비경쟁 강화
- 북한 핵,미사일 능력 날로 고도화
- 미국의 전략자산 동북아 집중, 전개 강화

2. 우크라이나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 발생 가능성 희박

- 폴란드 미사일 낙탄 불구하고 NATO, 러시아 상호 확전 불원
- 유럽 국민들 국제전/전면전 회피 성향 뚜렷
- 총돌, 국력상승 에너지 저감

3. 3차 세계대전은 발생하면 동북아에서 발생 가능성 다대

- 상호 동맹관계 및 신생 다자연대로 안보구조 복잡
- 동맹의 연루 위험성 점증, 총돌시 확전 가능성 다대
- 1차 대전과 같이 각국의 오판, 불원 속에 전쟁으로 연루
- 동북아 국민들 전쟁 회피 의식 부족
- 총돌, 국력상승 에너지 응축 중

4. 동북아 무력 충돌 예상지점

- 대만 해협
- 남중국해
- 휴전선

*사소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 비화 가능성 상존

*최근 바이든-시진핑 정상대화 의미, 단 수사가 아닌 행동에 반영 필요

5. 동북아 정세 안정화 방안

-신냉전 구도 강고화 저지

*신냉전 구도,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 vs 해양세력간 대결 양상

*한반도의 반도기능 회복시 동북아 정세안정에 기여 가능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 공고화시 한국은 해양세력 편입

-한중일 협력, 한러북일 에너지 다자협약체 가동

*유라시아 대륙의 시대 촉진 목적, 남북한 중,러 일본까지 협력

-국민들간 불신,증오 감정 완화 정부차원 노력

-남중국해 자유항행, 대만 현상유지 중국 보장

-남북한 관계 정상국가 관계 전환에 주변국 협조

동북아 안보관계 东北亚安全关系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부연구원

龚克瑜

上海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中心副主任、副研究员

东北亚安全关系(概要)

龚克瑜

上海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中心副主任、副研究员

一、特点：

- 1、安全问题泛化
- 2、安全环境恶化
- 3、安全困境深化
- 4、安全互信分化

二、原因

- 1、国际环境、秩序的变化影响
- 2、各国国情、意识形态、安全观迥异
- 3、历史遗留的传统和非传统安全问题
- 4、地区安全机制、架构的缺失

동북아 안보관계(요약)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부연구원

첫째. 특징

1. 안보 문제의 일반화
2. 안보환경 악화
3. 안보 딜레마 심화
4. 안보상호신뢰의 차별화

둘째. 원인

1. 국제환경과 질서의 변화에 따른 영향
2. 국가마다 국정, 이데올로기, 안보개념이 다름
3. 역사가 남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문제
4. 지역 안보 메커니즘과 구조의 부재

한중관계 전망

中韩关系展望

장징첸

산동대 동북아대학 부원장,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교수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中韩关系展望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教授

长期以来，在中韩双边政策的设计中，部分学者常常存在这样的思维逻辑：

一是，对方对我有需要或者有求于我，因此对方不管愿不愿意都要考虑我的利益与诉求。

二是，我处于某种国际关系的既有框架里，因此我不得不如此行动，即我的行动是出于既有约束机制的无奈，表现出一副无辜的样子。

第一种思维的错误在于：没有从双边关系的“建设性”去考虑未来双边政策的制定。

第二种思维的错误在于：根本没有从双边关系出发而是从“第三方利益”出发、或者用“第三方利益”来界定中韩双边政策。这就从根本上离开了中韩双边关系本身。

因此，我建议我们应该摆脱这二种惯性思维，在考虑与设计未来中韩关系具体政策的时候，能够真正从中韩双边关系的维度去设计中韩双边关系。

한중관계 전망

장징첸

산동대 동북아대학 부원장,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교수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 사이의 양자 정책 설계에서 일부 학자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사고 논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이익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내가 국제 관계의 어떤 기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고의 오류는 양국 관계의 '건설성'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양자 정책의 공식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사고의 오류는 전혀 양자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3자 이익"에서 시작하거나, "제3자 이익"을 사용하여 중국과 한국의 양자 정책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 자체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성적 사고를 버리고 향후 한중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구상하고 설계할 때 진정으로 한중관계의 관점에서 한중관계를 설계할 수 있음을 제언한다.

주요 변수를 통해 본 한·중 관계 전망과 개선방안
主要变量视角下的韩中关系前景及改善措施

홍 현 익

국립외교원장

洪铉翼

韩国国立外交院长

주요 변수를 통해 본 한·중 관계 전망과 개선방안

홍 현 익 (국립외교원장)

1.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 북핵문제

-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하면 한·미·일 3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시위에 나설 것이고 중국이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중 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것임.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중국이 반대하면 이 역시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삼가고 북핵 대화에 나오라고 종용해주기를 바라나 중국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하라고 하므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국간 협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2)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한한령

- 중국은 “민감한 문제를 타당히 처리하는 것”이라는 말로 사드 배치 문제를 지적해왔음
윤석열 정부는 사드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 사안이므로 중국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결정할 안보주권 사안임을 강조해옴.
-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인권 상황을 고려해 사드를 정식 배치하고 기지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23년 3월 경 사드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되면 중국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한·중관계를 훼손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존재를 부인해왔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가해진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한국인의 반중 감정이 약화되거나 한·중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3) 시진핑 주석 방한

- 중국 측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대가 크지 않음.
- 중국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볼 때, 시진핑 주석 방한 이전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짐.

4)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한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큼.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5) 미국의 대중정책과 한·미 공조

- 미국의 대중 첨단 원천기술과 첨단 장비 수출 금지 조치 및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은 한국의 대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직 한·중관계에 현안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대만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6) IPEF와 Fab 4

- 한국은 경제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IPEF나 Fab 4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음. 향후 이 그룹들이 본격화될 때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한·미·일 안보 협력

-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 있음.

2. 한·중 관계 개선 방안

1) 양측간 교류 및 소통 강화와 현인 대화 출범

- 양측은 외교 및 국방 장관 회담, 그리고 대통령 안보실장과 외교국무위원 간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방 및 외교 차관급 2+2 회담, 외교1차관 간 전략대화 등을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이 요망됨.
-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021년 8월에서 1년간 1.5트랙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분야별 미래비전 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음. 향후에도 양국 산·학·관 원로들과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한·중 현인 대화’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1.5 트랙의 전문가 협력위원회와 고위급 경제협의체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유익함.

2) 한국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

-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보다 전향적으로 구사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한다면 이에 따라 한·중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정부가 북한에게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하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종용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에 상당한 동력을 부여할 것임.

3)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 양측 모두 개최되기를 바라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성사시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양국간 상호 방문을 시행할 수 있음.

4)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 마무리와 호혜적 경험 강화

-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2단계 협상을 타결해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함.

5) 상호간 언론 및 SNS 상 악의적인 내용 게재 자제

- 상호간에 역사 왜곡을 삼가하고 비방, 중상 등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이나 SNS 상 게재하는 것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6) 다양한 안보 협력

- 양국 군관계자의 상호 방문과 교류
- 양국간 해양 협력대화와 해양경계확정 협상을 추진해야 함.
- 한·중 해상 구조훈련을 재개하고 해상 수색, 대테러, 보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함.

한중 관계 4.0

韩中关系 4.0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朴胜赞

中国经营研究所所长, 龙仁大学中国学系教授

한중 관계 4.0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협중, 협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미중 신냉전이 더욱 격화되면서 한국 내 중국 이미지는 한중수교 30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싱하이밍 주한대사의 접견 때 ‘한중 관계는 상호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향후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 주석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한관계는 이사할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숱한 굴곡을 겪으며 함께 성장해 왔지만 가까이 한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동존이vs구동화이vs취동화이vs화이부동

구동존이(求同存異), 구동화이(求同化異), 취동화이(聚同化異), 화이부동(和而不同) 등의 사자성어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한중 관계가 좋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며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비슷한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멘트로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은 바로 구동존이(求同存異)로 ‘한중 간의 공통점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차이점은 남겨두자’라는 뜻이다. 1955년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이자 외교부장이 아시아-아프리카 국제회의 연설 중 천명한 평화 공존 5원칙 중 하나로 처음 사용했고, 그 이후 중국과 체제가 다르거나 마찰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주 사용된 표현이다. 둘째, 구동화이(求同化異)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하자’라는 뜻이다. 2016년 9월 5일 중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기간 중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배치를 두고 시 주석이 ‘구동존이’를 말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구동화이’로 화답했다. 그 이후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되었다. 중국의 ‘구동존이’는 사드는 반대하지만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였고, 우리의 ‘구동화이’는 향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동화이는 우리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설명하며 만든 표현으로 2010년 12월 외교 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범식 때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언급했고, 사드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셋째, 취동화이(聚同化異)는 ‘공통점은 지속적으

로 취하고 차이점은 바꾸어 나가자'는 뜻이다. 우리가 이야기한 구동화이와 같은 맥락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대만판공실 주임 시절 양안 관계를 이야기하며 처음 등장한 표현이다. 그리고 2014년 7월 4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 서울대 강연에서 한중 관계의 미래 방향을 '취동화이'로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넷째,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표현으로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바른 뜻은 꺾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화이부동'은 '구동존이'와 그 뜻이 일맥상통한다. 양국 정부 고위급에서 자주 회자되며 사용된 네 가지 사자성어의 공통된 의미는 결국 한중 간의 차이와 다른 것을 상호 인정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해답이 보인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한중 관계는 협력과 모순, 갈등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사드, 동북공정, 문화공정과 같이 한중 간 모순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의도적으로 협력을 강조한 채 양국의 깊은 반목의 골과 아픔을 애써 숨기려고 노력해 온 측면이 강하다. 단골 메뉴처럼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에 자주 언급되는 네 가지 사자성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하자'라는 두 가지 명제를 깔고 있다. 문제는 두 개의 다른 명제가 서로 충돌하다 보니 양국의 관계는 계속 그럴듯한 정치적 발언만 내세울 뿐 그다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하자는 명제인데, 한중 양국 간에는 앞의 전제 조건인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여론과 중국을 혐오하는 계층은 심지어 중국을 논어의 자로 편 '소인, 동이불화(同而不和)'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이불화는 '오직 이익만을 위해 남과 어울리기는 잘하지만 진정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중 관계의 신뢰성이 매우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체제나 가치, 이념 등 태생적으로 서로 다르게 시작되었다. 우리의 관점과 시각으로 중국공산당을 바라보면 결코 한중 관계의 따뜻한 봄날은 찾아오지 않는다. 미중 충돌과 한중 양국의 역사, 문화, 가치의 충돌은 더욱 심화되어 추운 날씨와 함께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고 힘든 동면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옆에 두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운명으로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올리는 해안이 필요하다. 필자가 책에서 다룬 여러 영역과 미중 간 속내를 종합해 보면 미국은 중국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되지 않기 위해 갈등 관리를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뿐이다. 냉정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한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중국공산당이 망할 것처럼 인식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한 상황으로 끌고 간다면 결코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력하고 명확한 우리의 원칙과 명분을 내걸고 미중 양국 모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담함과 현명함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중 경제 관계 4.0 시대

20~30 MZ 세대들의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하면서 혐중, 혐한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중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뜻깊은 해가 무색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그 한편에 비켜 서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반중 정서가 한중 경제 이슈로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수출 다변화가 말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21년 기준 미국 GDP의 73%를 넘어섰고,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18%, 세계 경제 기여도는 25% 이상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중국 시장을 빼고 글로벌 경제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좀 더 냉정하게 한중경제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하게 될 한중 관계는 단순히 양국 간의 이슈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 이슈와도 연동되어 풀기 어려울 정도의 실타래가 될 수 있다. 이념적 관점에서 먹고사는 경제 사안을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의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결국 경제라는 버팀목이 있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경제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한중 관계를 설정해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30년의 한중 경제 관계를 회고해 보면 1992년 수교 당시 수직적 관계가 중국 경제발전과 기술 업그레이드로 인해 수평적 관계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교역 특징, 산업협력 방향에 따라 한중 경제 관계는 지난 3.0 시대를 거쳐 코로나가 발생한 2021년부터 새로운 4.0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중 경제 관계 1.0 시대(1992-2001)는 산업간 분업 시대로 수교 이후 IMF를 겪으며 공산품 중심의 가공무역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 수출이 확대된 시기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가 본격화된 시점으로 한국에서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과 EU에 파는 전형적인 수직형 밸류 체인 구조였다. 중국 내수시장보다 OEM, ODM 등 이른바 ‘삼래일보(三來一補, 원자재·샘플·부품 수입 후 가공+보상무역)’ 형태의 한중 간 가공무역 협력이 확대된 시기였다.

2.0 시대(2002~2012년)는 산업 내 분업 시대로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 혜택으로 수출확대 및 내수시장 진출형태의 대중 투자가 확대된 시기였다. 중국의 제조 역량이 확대되면서 지난 1.0시대 가공무역 형태에서 일반무역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2.0 시대는 중국의 WTO 가입이라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유통, 게임 등 서비스무역도 활발해지면서 한중 무역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며 양국 간 핵심 통상 이슈로 확산되기도 했다.

[표] 한중 관계 4.0 변화

구분	1.0시대 (1992~2001년)	2.0시대 (2002~2012년)	3.0시대 (2013~2020년)	4.0시대 (2021년~미래)	
대내외 환경 변화	한중수교 (1992), IMF(1997년), 중국 고속 성장 등	WTO 가입(2001), 금융위기(2008), 중국G2 진입(2010년), 한-EU FTA(2011년), 한미 FTA(2012년)	한중 FTA(2015년), 사드배치(2016년), 미중전략 경쟁(2018년) 등	미중 경제안보 전쟁 심화, 첨단산업 공급망 재배치, 코로나 확산, 한중 서투협정, RCEP 발효 등	
경제 관계	산업 간 분업	산업 내 분업	품목 내 경쟁 및 분업	첨단산업의 경쟁적 협력 과제, 초격차 시대	
교역 특징	무역 불균형, 공산품 가공 무역(삼래일보)	무역 불균형 확대, 상품+서비스무역, 가공→일반무역	불균형 축소 서비스 및 일반무역 확대	축소 및 추월 가능성?(10대 업종)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가능성?	
투자	한 → 중	동부 연해 지역, 동북3성 중심	광둥성 위주의 남부 연해 지역과 중부 내륙지역	생산 거점 다양화	클러스터 중심의 대도시로 전환
	중 → 한	소규모의 서비스 산업 위주	한미 및 한-EU FTA 활용 목적의 제조업 투자 확대	한중 FTA 활용 제조업+서비스업 투자 확대	-첨단산업 지분참여 -CVC(China Value Chain) 한국 참여
산업	노동집약형	-IT, 전기전자, 철	ICT, 자동차,	AI, 빅데이터, 반도체	

특징	제조	강, 석유화학, 콘텐츠 산업 -노동+자본집약형 융합산업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기술집약형+ 내수시장	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이전
GVC	한→중→글로벌	-한→중→글로벌 -중국 내수시장	-GVC 다변화 -중국+동남아 +한국→글로벌	-최첨단 산업: 디커플링될 것인가? -전통산업: 공급망 협력

*자료: 박승찬

3.0시대(2013~2020년)는 품목 내 경쟁 및 분업의 시대로 5세대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3.0 시대는 한중 경제 관계의 경쟁과 분업 그리고 사드 사태로 점철된 이른바 ‘정치 경제적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2015년 중국제조 2025 발표 이후 산업의 고도화가 빨라지면서 한중 산업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산업간 기술격차가 좁혀져 일부 전략산업의 경우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2017년을 기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34%)이 한국(29%)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2021년은 세계시장 63%를 차지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기존 한-EU FTA(11년), 한미 FTA(12년) 활용 목적과 한중 FTA 체결(15년)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점차 확대되어 한국의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위 중 중국은 1992년 23위에서 4위로 급부상했다.

4.0시대(2021~미래)는 첨단산업의 경쟁적 협력관계로 본격적인 한중 산업간 초격차 시대가 될 것이다.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8대 주력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미국, EU 등 제3국에서 제품 경쟁력과 가격 전가력(Power of Price)을 무기로 한 중국산 제품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 기존의 주력 수출품목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한중 산업구조가 8대 주력 산업과 기타 산업군과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교역 비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한중 교역 관계의 착시 현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반도체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2010년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은 15.1% 정도였지만 2020년 기준(홍콩 포함) 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 경쟁력 부상으로 2011~2018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도는 높아졌고,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던 2019년 이후는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중 간 상품 경합도 및 무역특화지수(TSI)도 높게 나타나며 한중 간 경쟁 구조가 더욱 본격화되는 구조이다.

미중 경쟁 속 윤석열 정부, 전략적 '갈퀴'에 직면
中美竞争中的尹锡悦政府, 面临战略“撕裂伤”

정지용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복단대 교수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教授

中美竞争中的尹锡悦政府，面临战略“撕裂伤”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教授

中美之间的大国战略竞争，经历了眼花缭乱、不讲规矩、没有规则的“乱斗”阶段。这一阶段的后果就是中美双方都遭受了巨大的损失，而在疫情的催化下，这种损失事实上又被放大，并波及到了全世界。

在两国首脑直接会面后，似乎有在一定领域管理和规制“乱斗”的迹象，开始尝试着向收起打斗，走向制度化的竞争阶段演化。

然而，这种演化，只是竞争烈度的调整，而并非竞争程度的缓和。相反，这种更为制度化的竞争引发的震荡预计会比过去更为激烈与深远，全方位的乱斗成为规定范围内的极限战斗，摧毁之战演化成为一城一地之战。因为双方一旦了解了底线所在，划定了战场范围，如不发生核战争等限度也给了各方施展拳脚的更大空间，各个领域内的竞争将朝着这个底线的无穷大方向演进，如情报、半导体等领域。

这样的战略态势变化自然会对韩国产生莫大的影响。

韩国过去一直是中美竞争中的“摇摆国家”，战略上自诩“中坚国家”（或“中等强国”），战术上奉行“经中安美”（即经济上靠中国，安全上靠美国），行动上运用战略对冲“吃两边”。

然而，环境的变化导致了韩国的选择空间不断萎缩。原因有四：

一是美国的强压，美国一直在压缩世界各国的选择空间，用极端的“二选一”与敌友逻辑要求选择美国，而对于小盟友韩国，美国当然更不会对韩国有“三心二意”。美国更是要求韩国不要过于顾及经济利益而忽视战略利益，如同盟、价值等“长期战略政治利益”远大于短期的经济与发展利益，以此来说服韩国；

二是韩国内政的变化。近年来国际国内环境的变化，使得韩国内部保守化、民粹化明显，导致的结果就是尹锡悦上台。而尹锡悦上台后也进一步导致了对进步势力的全方位打压，动用各种借口试图铲除其生存根基。这当然也激起了进步势力的反弹与反击。这种左右对立也进一步压缩了韩国的选择空间，容不得各方势力有模糊的可能。在内部的政治转向与美国的“忽悠”之下，当政的保守派的选择自然也就非常鲜明；

三是韩国内外经济环境导致对中国的认知有巨大的退步。在产业上除了半导体之

外中国对韩国形成了压倒性优势。到目前为止，韩国产品中对华依赖度70%以上者达2430类，100%依存度者达500多类产品。中国经济的风吹草动，意味着韩国经济的强震成也中国，败也中国，这是普通韩国人对中国的认知。2021年底一个车用尿素水就能让韩国经济陷入困顿，这让韩国相当震惊和害怕。而萨德事件的冲击也让韩国认识到了经济武器的威力。总的看，中国经济上巨大的进步彻底埋葬了韩国在上世纪90年代建立起来的对华巨大优越感，韩国陷入了担心、依赖、畏惧等复杂情绪中。而民众也将这种失落感转化成了负面情绪，将面临的问题都怪罪于中国，政客们也推波助澜，导致对华认知甚至都低于日本。

四是韩国国力与民族心态的变化导致了身份与心态的变化。韩国人均GDP高过4万美元，排名全球前十，进入发达国家行列。而在美国的帮助与护佑下，韩军自认其军力也跃升至世界前7，甚至前5。与此相对应，韩国的战略家们认为韩国已经不再是“中等强国”，而应忝列“强国”之林，其战略自然也不应囿于朝鲜半岛和东北亚，应从全球角度重新思考韩国面临的战略环境，尤其应追随美国行使其强国之力。身份与心态的转变当然也会反映到战略演化之中，这一角度也能一定程度上理解韩国要求中国“尊重”的根源所在。

在这样的环境中催生的尹锡悦政府的外交安全战略，自然会带有深刻的烙印，表现出的更多是“一边倒向美国”。在文在寅政府后期，尤其是尹锡悦上台后，韩国政府先后多次染指台海与南海问题，并明确将人权、价值观等奉为对华外交的指南，都是这种“一边倒”政策的反映。

最近发表的韩国版“印太战略”透露出了这种变化。即战略上韩国将以“强国”身份处理国际事务；战术上将奉行“安美经世”，即安全上追随依赖美国，经济上转向全球而不仅仅是中国；行动上将全方位地与美国一起参与围堵并打压中国。

有人甚至评价称，尹锡悦政府的对华政策不仅毫无新意也乏善可陈，因为从美国国务院网站上都能找到相同的叙述，只须将“美国”替换成“韩国”就好，几乎是美国的翻版。

一国的外交安全战略被锁定于美国，毫无疑问，其前景自然也已经注定。尹锡悦政府的外交安全战略决定了其与周边国家的磨合将不可能一帆风顺，尤其是与朝鲜的战略冲撞将重塑朝鲜半岛的地缘态势。因为从历史上看，唯一能够真正多次“驯服”韩国政府的，并不是美国，而是朝鲜。尤其是在尹锡悦政府的外交安全战略如此僵硬地绑定于美国的情况下，朝鲜更是游刃有余。

但是，无论心态与身份发生何种变化，总归是形势逼人强，尹锡悦政府的战略执行也会在内外环境的激荡中得以重塑，能不能完整不变形地走到底要打上一个大大的问号。这要取决于几个方面的因素。

一是中美战略竞争态势的演化。二是韩国自己的利益盘算。三是韩国内政的斗争

演变。四是朝鲜半岛上地缘态势的演进。

现在不是韩国选择了美国，而是选择了美国可能获胜这样一种心理预期。

有三个问题，安全上韩国能走多远，经济上现在还能发挥什么样的作用，人的问题上尤其是领袖问题能够发挥什么样的作用。

一、我们的心态要变，你是大国，要用大国的心态看待问题，不一定问题是韩国的。石老师的话很重要。外交是有问题的。我们一直以为外交官团体是睁眼看世界的一个群体，但事实上并非如此，有些外交官也是瞎搞的。现在外交的战略整体上内向化，这是导致问题的一个根源。

二、整体上对韩国还是以拉为主，但拉的手段表现出来是打还是拉，这个需要视具体的事情而定，要精细化处理打拉的问题，而不是一边倒地打或者拉，这种配合如何是重要的。

三、要防范中韩间的问题，过去的第三方问题演化成中韩间的问题。我们过去都在处理中韩之外的问题，未来可能中韩的问题将成为新常态。这个是我们的一个新局面

四、积极的态度才有积极的办法。中韩整体上要好，是在目前这种局面下影响下，中韩如何调整姿态和心态，还有手势。

종합토론

김진호 단국대 교수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

한중관계는 수교 전 만남과 준비과정 10년 과정을 거쳐 수교 후 30년의 세월을 거쳐왔다. 이러한 시기에 양자 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평화문제로 발전되어 왔는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취합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강대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에 투영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는 상호보완의 협력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를 거쳐 견제 속 경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남북한 관계도 교류와 협력에서 대립과 경쟁 관계를 반복하며 현재는 양자 간 경쟁적 대립 관계에서 진영 간 대립 관계로 확대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위협은 남북관계를 대치국면으로 이끌었고, 진영 간 대립에서 강대국 간의 협력에서 미일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며 이는 한국의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부분 외에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강대국 정치의 모순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서로에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양자 관계에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서로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학적 국제정치와 세계정치와 안보 그리고 지경학적 글로벌공급망은 현재 동북아국 국제관계에서 한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와 다자관계의 틀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국과 중국 양국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동북아 안보와 평화 그리고 발전이라는 주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어느 국가의 정치와 대외정책이 동북아 안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잠재적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욕,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중국의 안보와 주변 영향력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누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할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내 어느 국가가 역내 안보, 경제, 기후 등을 포함한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할의 비중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안보를 위한 무기 경쟁 완화, 환경에 대한 협력적 노력,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 간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 북한, 한국 그리고 몽골의 역할과 현황을 우리는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은 결국 동남아시아의 발전으로 연결되며 상호 발전적인 동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협력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체인 CPTPP, RCEP, ASEAN 등의 문제도 고려하며 역내 협력과 안보의 균형을 지킬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협력체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확대하여 동북아국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리 및 장 차관급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후와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고 정기적 교류를 해나간다면 안보적 문제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건설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러한 협력에 대한 구상도 필요할 것이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북한, 몽골, 러시아 및 미국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综合讨论

东北亚及中韩关系的展望（概要）

王俊生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国周边战略研究室主任

针对朝鲜半岛局势和中韩关系有以下三个观点：

第一、明年朝鲜半岛局势有可能更为紧张；

第二、明年中韩关系也有可能出现新的紧张；

第三、当前中韩需要加强沟通，加强合作。

동북아 및 한중관계 전망(요약)

왕진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에 대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을 갖는다.

첫째, 내년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될 수 있다.

둘째, 내년에 한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이 닥칠 수 있다.

셋째, 현재 중국과 한국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